

# 광주시민사회단체 “4일,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

## 尹탄핵 심판 선고 발표

광주비상행동, 현재 앞 상경 투쟁 25명 상경해 안국역 인근 철야농성 “현재 좌고우면 말고 법대로 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이 4일로 발표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현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서울로 상경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는 동시에 철야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더욱 거세게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하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벌써 120여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국민의 바람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내란 진압을 방해한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수괴를 풀어 준 지기연과 심우정을 즉각 탄핵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12·3 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 함께 폭력을 선동한 국민의힘의 해산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이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마은혁 후보 임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을 청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헌법 수호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지금 고통스러운 불구덩이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으며 25명의 인원이 상경 투쟁에 나섰다. 기자회견 직후 상경 투쟁단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일 오후 9시까지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농성 투쟁을 위해 버스로 이동했다.

현재로 향하는 인원들은 짐낭과 소지품을 챙기며 반드시 파면 선고를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유봉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겁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않으면 파국이니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철영(68) 광주노점상연합회장은 “4일로 파면 선고 기일이 발표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오겠

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전남본부도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대석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대표는 “12·3 비상 계엄 이후 123일째 되는 날이다.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선고일을 정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며 “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며 국민을 배신한 명백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한덕수는 마은혁을 즉각 임명하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서울 집중 투쟁을 위해 전략 농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매일 오후 7시 열렸던 시민대회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일 선고 기일에는 민주광장에서 스크린으로 현재 발표를 생중계해 시민들과 함께 할 방침이다.

정승우 수습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 광주·전남교육청, 4일 민주시민교육 실시 권고

### 지역 내 각급 학교에 안내 공문

광주·전남교육청이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지역 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자율 시청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역사·민족의식 함양과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탄핵심판 선고 영상 시청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보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

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상계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주요 계엄령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사회적 갈등 방지, 중립적인 내용 활용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전남교육청도 지역 내 각급 학교에 4일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유철 기자

## 오월어머니 합창 공연, 용역업체 선정 잠음

### 협상대상자 A사 계약 포기 의사 일부 참가자 ‘정치인 개입’ 거부 ACC측 ‘사업 차질 없이 진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오월어머니’들의 애환을 담은 공연이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잠음이 일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사업 주최 측인 아시아문화전당(ACC)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24일 공연을 앞둔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의 공연 사업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용역업체 A사가 계약 포기 의사를 나타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공연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흐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광주 서구 의장이 운영하는 행사 기획사로, ACC가 재공고한 지난 2월 11일 4억7680만원 규모의 용역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전 의장의 동료인 더불어민주당 김형미 서구의원이 A사에 채용됐고, 이후 김 의원이 직접 사업제안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을 맡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지만, 현직 의원이 동료 의원의 사업체에 합류해 영리 목적의 계약을 추진한 점이 지역사회 반발을 샀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사는 계약 포기 의사를 AC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 측은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CC 관계자는

“용역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협상 기간이다. 절차상 협상 막바지이고 아직 해당 업체가 공식적인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시민께 선보이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연에 참여하는 일부 ‘오월어머니’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참가자는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40여년간 묵혀온 우리들의 아픔을 담은 무대인데, 5·18과 접점이 없는 정치인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부 어머니들은 공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ACC는 2018년부터 5·18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개최해왔다. 정유철 기자

## 남편 살해한 심신미약 70대 2심서도 중형

### 광주고법, 징역 10년 원심 유지

남편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믿고 흥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남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과거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55년간 지속된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망상 속에서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해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이 비록 선처를 호소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 검찰, 동료 선원 학대·살해 선장 2심서 엄벌 촉구

### 1심서 ‘살인·시체유기’ 징역 28년 시체유기 도운 선원 징역 3년 선고

동료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에 대해 검찰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만·정재우)는 1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각각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선장 A씨는 징역 28년형, 선원 B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분통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하며 최종 의견의 포문을 열었다. 검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렇게 장기간 가혹 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 대해 기존의 징역 28년 구형과 선원 B씨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라는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원 B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 이들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선원 3명의 1심 항소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유철 기자